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주정



‘상생발전’을 다짐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난제에 봉착했다. 전남으로 광주공항 국내선을 옮기면 광주가 망하고, 빼가지 않으면 무안공항이 죽을 수 있는 ‘치킨 게임’을 강요당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 방침을 담은 ‘2011~2015년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다음달 확정·발표하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계획된 것으로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 무안공항 항공수요가 계획 대비 2%에 불과하고 운영적자는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양항제 유지에 국가적 낭비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무안공항을 활성

광주공항·무안공항 둘 다 살려라

화시키려면 양 공항의 통합 밖에 별다른 수가 없으며 이전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고약한 선택은 허경만 전남지사 재임 시절 전남도청 이전 결정 때도 진행된 바 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의 물에 익숙해진 행정 인프라를 한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정착·지역적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서 소모적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현재 국립 ‘문화의전당’ 건립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도청별관 보존 논란도 도청이 전에서 임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광주·전남이 분리됐

을 때부터 한정된 자원을 서로 독점해야 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제로섬 게임을 극복하는 것에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상생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해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한전을 유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광주가 과감히 역내 유치를 포기하고 전남은 광주와 가까운 나주에 힘을 모으으로써 ‘이웃과 손을 맞잡아야 같이 열린다’는 명제를 구현해 냈다.

공항문제도 이렇게 마주보고 달릴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일수록 한쪽이 달려들면 다른 한쪽도 피하지 않는 법이다. 결과는

공멸이다. 공멸을 피하려면 ‘상생발전’이라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해결책은 나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광주와 전남이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이 무안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면,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항공전문가들은 글로벌 항공운수업체 페덱스(FedEx)의 메인 허브인 미국 뎀피

스 공항을 벤치마킹해 무안공항을 국내외 항공특송기업 또는 물류기업의 동북아 항공물류 전용공항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

무안공항을 민영화된 우정사업본부의 지역물류기지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항공특송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광주공항을 죽이는 일 없이 무안공항을 항공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생각 바꾸야 해결책 나와”

공항을 2곳이나 보유한 뉴욕 같은 도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항운영에 따른 낭비가 걱정된다면 공항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광주에 주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비행소음과 도시발전 장애물인 군 비행장도 함께 내보내자는 제안이다. 공항 포기로 인한 손실을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심개발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군 비행장의 이전을 전남의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양항문제는 전남이 더 서둘러야 할 일이다. 정부가 국내선 이전을 강행한다고 해도, 무안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때를 놓치면 이런 대안마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뺏길 수 있다.

(여론매체부장) jnews@kwangju.co.kr

시설

北 ‘막가파식 도발’ 강력히 응징해야

북한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포탄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강행했다. 북한군이 23일 오후 2시34분께부터 1시간가량 서해 연평도 북방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로 해안포와 곡사포 100여 발을 발사한 것이다. 이 중 수 발은 민가에 날아와 우리 군인과 주민들 상당수의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우리 군이 북한 해안포 기지 쪽으로 수발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북한의 이번 해안포 도발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정전협정 위반행위다. 특히 우리 영토에, 그것도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의 무력 도발로 또다시 우리 군 전사자가 발생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이 같은 막가파식 도발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이번에도 확고한 대응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등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서해 5도 주민과 개성공단 근로자 등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 안전을 위해 최우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경제·금융시장 영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국민경제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민들도 우리 정부와 국군을 믿고 동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사태가 물고골 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은 북한 체제를 붕괴로 몰고가는 자살행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1주일에 200만원 넘는 ‘논술과외’라니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감을 느낀 광주지역 일부 수험생들이 서울에 있는 논술학원에 대해 물리고 있다. 이번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데다 수시의 경우 학생부 성적 등에서 변별력 확보가 어려운 탓에 대학들이 논술 성적으로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논술시험이 예정된 대학은 고려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중앙대·한양대·숙명여대를 포함해 10곳이 넘는다. 이처럼 논술의 비중이 커져다 보니 일부 유명 학원은 지방학생 상경 시 일주일 논술 수강료 150만 원과 오피스텔 숙박비를 포함해 2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며 ‘족집게’ 강사의 경우 일주일 지도비만 2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학원들은 ‘수시 1차 논술 적중’이라는 과장광고로 수험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제 우리 광주가 앞장서자. 혁신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고 교육 본래의 목적이 맞는 배움터로 뿌리를 내린 ‘교육 수요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육

그럼에도 수험생들이 물리는 것은 불안 심리 탓이 크지만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다 그나마 광주지역에 체계적인 강좌를 실시하는 논술학원이 없기 때문이다. 인문계열은 준비가 가능하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요구하는 화학, 수리 등 논술에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논술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웬만한 가계의 한 달 수입에 버금가는 ‘1주일 200만~300만 원 고액과외’가 가담한 일인가.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이 어찌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공교육이 논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불법 고액과외의 판름은 막아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교육 당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학부모와 수험생들도 1주일 간의 ‘반짝 논술’로 수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신문의 사실을 읽고 배워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파국 부르는 치킨게임

광주시는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무안공항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군 비행장만 남겨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전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연간 136만명이 이용하는 광주공항을 2만 명에 불과한 공항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 입장은 정반대다. “무안공항 개항 때부터 광주공항 국내선의 이전은

가장 가까운 대안은 이 지역민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민주당이 민주개혁진영이 기대한 수준의 정당으로 재탄생하고, 또 민주당 이외의 다른 좋은 정치세력이 성장하여 선의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총선 및 대선이 각각 1년 반 및 2년 정도 남아있다. 시민운동가들 중에 시민운동의 직접적인 정치개입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기회에 민주당을 강화하는 일에, 아니면 민주당 이외의 다른 정치세력을 키우는 일에, 혹은 더 큰 정치판을 만드는 일에 직접 나서서 좋은 것일까 생각한다. 그래서 총선이 아닌, 발전적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운동과 정치의 경계선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전남대 교수·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종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한국환



“모든 아이를 똑같은 조건에서, 뒤쳐지는 아이를 한 명도 방치하지 않으며, 완벽한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핀란드의 교육이다.

몇 년 전부터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핀란드 교육을 배우자’, ‘혁신교육을 하자’, ‘잠자는 교실을 깨우자’, ‘교육의 틀을 바꾸자’ 등으로 핵심은 혁신학교의 선결과제, 그리고 지원이다.

‘혁신학교’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으로서 배움터에 생명력이 있고 창의성이 존중되며 개인특성이 인정되는 새 학교 문화를 가꾸는 운동의 일환이다. 이는 전통적인 학교

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래서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펼쳐가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지원·관리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시민단체와 교육기관 등이 네트워크화를 통해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제 우리 광주가 앞장서자. 혁신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고 교육 본래의 목적이 맞는 배움터로 뿌리를 내린 ‘교육 수요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육

광주교육 혁신으로 새 출발을

교육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보다 진보되고 개혁적인 학교문화를 추구하며 임시주 교육이 아닌 ‘참된 성장’을 지원하고 인도하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지식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암기 등과 같은 활용가치 없는 정보의 답습이 아니라, 탐구과정이 중시되며 창조적인 지식의 생성과 활용을 위한 학습을 선도(先導)하는 교육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교사가 칠판 앞에서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는 끝났다. 학생 개개인을 고려한 다양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주도하에 맞춤형 장학을 지원하는 등 교육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교육이 정착되려면 교육인적자원의 지원 아래,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교육방법

창’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휘구 광주시교육감님은 3대 핵심공약의 하나인 ‘혁신학교’의 선정을 내년에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3년간 6곳씩 총 22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으로 민주·인권·예향 등 광주의 정체성에 걸맞은 소위 ‘빛고을 혁신학교’를 충만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선정·지원·관리하고 차별화하여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해가는 혁신 교육청의 선봉에 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하여 혁신교육이 미래의 참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광주시교육청이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선일일신(日新又日新)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명품 교육행정을 선도하는 최우수 교육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경영학 박사·월계초등학교 교사)

장애인 쉽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많이 늘려야

‘BMW로 출근한다’는 말이 있다. B(Bus)·M(Metro)·W(Walking)의 약어로 버스, 지하철, 도보를 이용해 경제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표현이다.

하지만 BMW를 이용하고 싶어도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바로 장애인들이다. 이들이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하철에 장애인 전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아마도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짐 박을 나서기만 쉽지 않다.

예전 미국에 가보니 널링버스(kneeling

bus)가 있었다. 널링버스는 계단식으로 된 현재의 승강기 높이를 보도 높이까지 낮춰 장애인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도록 제작된 버스였다.

이 널링버스가 우리 광주에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버스에 타기 어렵고, 택시는 잘 서질 않아 길가에서 고생하는 장애인을 보면 안타깝다. 희망의 한걸음부터 시작해 장애인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지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1동

無等鼓

“울면서 의계를 내놓았다. 그 의계를 단지 보여주려고 가져간 것이다. 절대 두고오지 않을 것이라고, 문화부장관은 약속했다. 우리는 프랑스의 국외과 합법성, 직업윤리에 반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1993년 9월19일자 프랑스 르몽드지에는 며칠 전인 14일 미테랑 대통령과 한국 김영삼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따라했던 프랑스 국립 도서관 사서가 ‘외국장관 의계를 한국에 놓아두고 돌아온’ 심정을 토로한 인터뷰가 실려 있다.

당시는 한국 경부고속철도 차량 수주전에서 프랑스의 TGV(테제베)가 거의 확정적이었던 시기로, 잔뜩 고무된 미테랑은 정상회담에서 ‘외국장관 의계의 반환은 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방식’을 따를 것임을 천명했었다. 하지만 그때 뿐, 미테랑이 프랑스로 떠나자마자 상황은 돌변했다. 그 다음을 옮겨붙여 저항하는 프랑스 사서의

이야기, 끝없는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미로로 끌고 들어간 프랑스 외부성의 이야기가 지루하게 이어졌다. 당연히 미테랑은 빼졌다.

며칠 전 이뤄진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장관 도서 대어 합의에 대해 프랑스 내 반발 여론이 거세다는 보도도. 특히 의계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도서관 관계자들이 자국 정부에 합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시흥



‘이번 합의는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문화재 반환 요구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 유다.

어쩐지 17년 전 이야기 되풀이되는 느낌이다. 양국의 정상이 합의 해놓으면 실무부서나 해당 기관들이 이런저런 이유와 조건을 내세워 무산시키는 ‘뻔한’ 시나리오가 불현듯 떠올랐다. 물론 프랑스가 정상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겠지만, 역시 문화재는 한 번 빼앗기면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진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인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신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